

감염인 관리 불필요하다

박광서 립포럼 대표

새정부의 출범으로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크다. 에이즈 감염인/환자들 또한 이전보다 나아진 에이즈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았다.

이 좁은 한반도에 에이즈라는 질병이 들어온 지도 벌써 20여년이 다 되어 간다. 강산도 두 번이나 바뀔 시간이 흘렀건만 에이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별로 바뀐 것이 없어 보인다.

에이즈 관련 법령 중 에이즈 감염인을 위한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모두 관리를 위한 법령들뿐이다. 이 땅에선 에이즈라는 질병을 얻게 되면 인권마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정부정책이 감염인을 음지로 숨어지게 해

가장 큰 문제점을 뽑자면, 환자가 아닌 감염인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정책이라 생각된다. 그 많은 감염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들의 인권은 어떻게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지 미리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감염인은 굳이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관리를 할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데도 정부에서 실명으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정책이다.

정부에서는 감염인의 치료를 위한 보조를 해주고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고, 이러한 것들이 대다수 국가들의 정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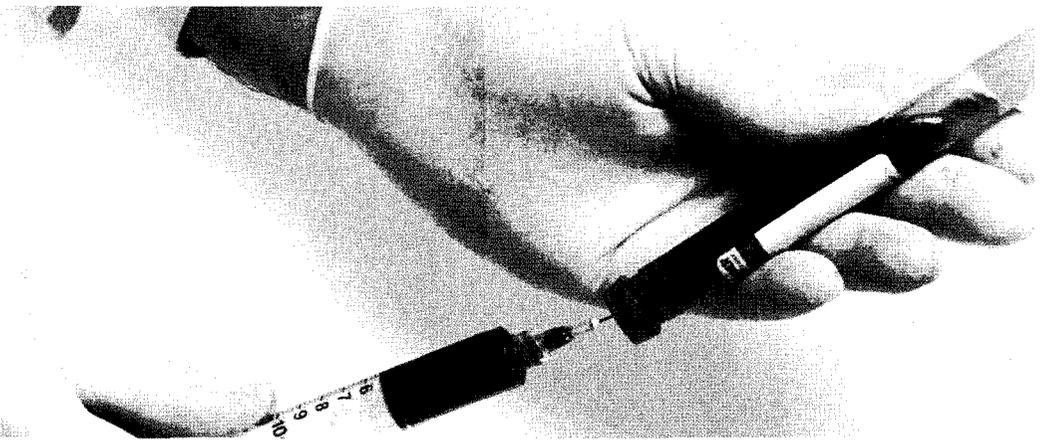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직접 감염인을 관리하는 일들은 흔치 않다. 게다가 신체 건강한 감염인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다보니 오히려 감염인들이 음지로 숨어들게 하는 일들도 왕왕하다.

교육을 미리 받지 못해 준비가 되지 않은 공무원들 때문에 감염인들이 상처받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심지어는 감염인이 발견되었다고 그 집안 식구들 모두를 보건소에 초청해 에이즈검사를 시키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

가장 기본인 본인확인도 하지 않고 감염여부를 알리는 일들도 생기고... 이 모든 것이 감염인을 관리하다 보니 생기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이다.

꼭 익명검사 실시를...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검사를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익명검사가 익명으로 끝나지 않고 실명관리로 이어지다 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익명검사라고 해서 갔더니 전화번호와 이름을 요구하는 보건소도 있고 또 주소까지 알아내려는



보건소도 있다. 검사결과도 전화로 알 수 있다 보니 검사 전후의 상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익명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할 하게 되었지만 결과를 전화로 알게 되다 보니 지금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앞으로 안전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과는 직접 와서 사회복지사와 의사와의 상담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감염인들이 식구와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뚜렷한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약을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혜택을 받고 싶어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가 무척 힘이 든다.

따라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해서는 최소한 진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을 해주었으면 한다.

가족이 있어도 가족들 몰래 치료를 해야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가족들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요양센터 건립을 준비해야

에이즈로 인해 임종직전의 사람들과 말기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대부분 말기로 전이되면서 가족들에게도 가지 못하고 갈 수 있는 곳이 너무나 적다. 물론 의료진이 항상 함께 하는 호스피스성격의 센터의 건립이 두척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에이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 감염인 수가 다른 나라보다 적기 때문에 아직 정부에서는 약간 미온적인 정책을 펼치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에이즈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특별한 질병임을 숙지하여 감염인에게는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일반인들에게는 에이즈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제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